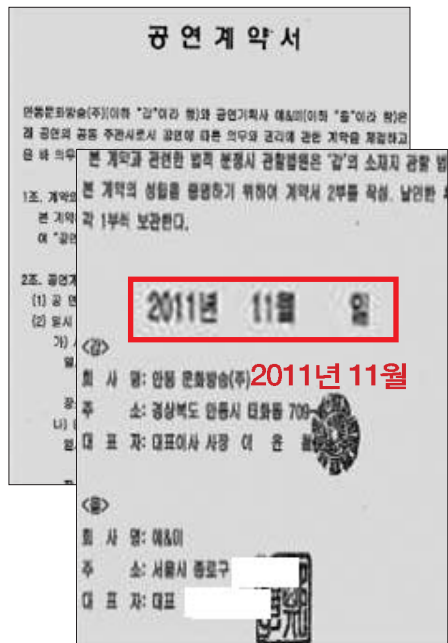


발행인: 정영하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전 화: 02-789-3881~6
팩 스: 02-782-0135
홈페이지: www.mbcunion.or.kr
파업채널M: www.saveourmbc.com
트위터 @saveour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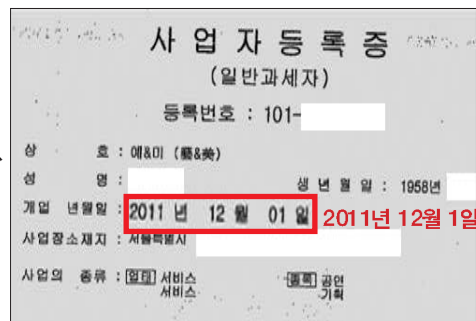
총파업특보

J씨 밀어주려 유령 업체와 불법 계약 김재철 배임죄 입증 중대 물증 드러나

김재철이 무용가 J씨에게 총 제작비 12억원의 공연을 밀어주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와 계약을 급조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 공연된 <MBC 창사 51주년 기념공연 '뮤지컬 이육사'>의 계약 당사자는 안동MBC와 J씨의 기획사 '예&미'이다. 지금까지 '예&미'는 뮤지컬 제작 경험이 전혀 없던 J씨의 신생 기획사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MBC와 계약할 당시 예&미는 법적으로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방송 MBC가 실제도 없는 유령 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12억원을 지원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료1



자료2

SK 등이 7억 원을 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억 원을 협찬했다. 그런데 당시 공연의 예상 티켓 판매율은 14%, 예상 수익은 고작 5천5백만원에 그쳤다. 애초에 12억 제작비를 들여 5%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 아무리 공익적인 프로그램이라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기획이었다는 게 공연계의 대체적 평가다. 이 공연에서 J씨는 예술총감독과 안무, 여자 주인공으로 1인3역을 맡으며 개인출연료로만 4천만 원을 챙겨갔다. 평생 전통 무용가를 자처해온 J씨는 난생 처음 뮤지컬 주인공 자리를 덥석 꿰차면서 공연에서 노래도 불렀다. 본인도 민망했던지 J씨는 뮤지컬 출연진을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예명을 회사명을 그대로 따서 '예미'라고 쓰는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재철은 J씨에게 공연을 넘겨주기 위해 정체불명의 유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무리수까지 썼다. 모든 절차와 검증은 무시됐다. 뒤집어 보면, 김재철이 대형 공연을 통째로 넘겨줄 목적으로 J씨로 하여금 '구색맞추기' 식으로 뮤지컬 기획사를 '기획 설립' 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업자등록도 없는 J씨 업체와 계약

<뮤지컬 이육사>는 단 11회 공연에 무려 12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이다. 제작비 10억 이상의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획사는 국내에서 손에 꼽힐 정도다. 김재철의 MBC는 뮤지컬 제작 경험이 전무한 J씨의 기획사에 이 공연을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통째로 몰아주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안동MBC와 '예&미' 사이에

체결된 <뮤지컬 이육사>의 공연계약서(자료1)를 보면, 계약 시점이 '2011년 11월'로 적혀 있다. 계약 주체는 '안동 문화방송(주)의 대표 이윤철', '예&미의 대표 J씨'이다. 그런데 J씨가 대표인 '예&미'의 사업자 등록증(자료2)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예&미'의 개업 일자가 '2011년 12월 1일'로 돼 있다. <뮤지컬 이육사> 공연 계약서를 쓴 11월보다 한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사업자를 등록했다. 바꿔 말하면 MBC와 계약서를 쓴 시점에 '예&미'는 사업자 등록도 없는 유령 업체

였으며, MBC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부랴부랴 사업자 등록을 낸 것이다. 일반 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불법 계약'이다.

J씨 배만 불린 김재철의 '배임'

김재철이 몰아준 제작비 12억원은 결국 J씨와 J씨 기획사의 배만 불렀다. 제작비 12억 원은 MBC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마련한 협찬금이다. 삼성과 포스코,

특경가법상 배임 김재철 추가 고소 조합, 경찰에 세 번째 고소장 제출



김재철 사장은 점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신세로 다가서는 것인가? 노동조합은 어제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재철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지난 3월 법인카드 7억 원 부정사용에 관한 업무상 배임 고소, 지난 4월 무용가 J씨에 관한 특혜와 관련한 고소에 이어 세 번째다. 20억 원 이상의 특혜를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데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배임 혐의가, 7억 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사적인 용도가 분명한 2억 1천만 원과 J씨 오빠의 부당 특혜 채용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J씨와 아파트 3채를 함께 구입, 관리하면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재철 비리 수사로 국민적 의혹 풀어야"

고소장 접수에 앞서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조합원 5백여 명이 참여했고, 언론사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정영하 위원장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비리 혐의자가 MBC를 차지하고 '알박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계좌 추적권 없이도 취재력 하나로 이만큼 밝혀냈는데 수사기관이 무시해선 안 된다"는 말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신인수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장종오 변호사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이 분(김재철 사장)이 경제관념이 희박하거나 공적인 자금을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사실상 재산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기관이 통장을 압수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실제 구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女 경호원들의 밀착경호 비웃음거리 된 김재철의 꼼수

지난 25일 오랜만에 여의도 방송센터로 출근한 김재철이 느닷없이 여성 경호원 5명의 엄호를 받는 장면을 연출해 지켜보는 조합원들을 몹시 의아하게 만들었다. MBC엔 여성 청경이나 방호원이 없어 사장이 여성 경호원에게 둘러싸여 출근하는 모습이 몹시 생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 경호원들은 연휴가 지난 뒤인 어제(29일) 아침 김재철의 출근길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김재철이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를 나선 정오 직전, 현관에 미리 도열해 기다리고 있다가 걸어 나오는 김재철의 옆에 바짝 따라 붙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밀착 경호 업무를 다시 수행했다. 사측은 “사장의 신변에 위해가 우려돼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여성 경호 인력 10명을 보강했다”며 여성 경호원 출현의 이유를 밝혔다. 굳이 여성 경호원을 사장 곁에 붙인 조치에 쏠린 사내 외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사측은 여성 경호원을 쓰게 된 건 김재철 사장의 지시가 절대 아니며 관련 부서의 독자 판단과 건의를 김 사장이 수용한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찌감치 실패로 마감됐다. 비참한 종말을 맞은 카다피의 사례를 굳이 연상하지 않더라도 김재철의 행각 곳곳에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지에 대해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도 마비된 '멘붕' 절정 단계의 느낌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돈, 여자문제 땀땀” 황당 변명

무용가 J씨와 아파트 3채를 동반 구입한 뒤 전세까지 함께 관리해온데 대해 김재철이 임원회의에서 했다는 해명 역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김재철은 “구설에 오른 건 자신의 처신이 신중치 못했기 때문이지만 돈이나 여자 문제는 땀땀하다”는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은 이 자리에서 “친하게 지낼 때는 자신이 지나치게 잘해주는 면이 있다”는 말로 J씨와 관계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어쨌든 다 내 탓이다. 지금은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자신이 중요한 정치인의 반열에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치기도 했다. 조합은 더 늦기 전에 김재철이 이성과 현실 감각을 되찾아 자진 사퇴라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길 충심으로 권고한다.

조합은 물론 조합원 어느 누구도 김재철 사장의 출퇴근과 업무를 제지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여성 경호원을 데리고 회사 출근을 재개한 김재철의 행태는 기를 쓰고 노동조합을 폭력 세력으로 음해하려는 비열한 음모의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여성 경호원까지 동원한 김재철의 꼼수는 스스로를 사내외의 비웃음거리로 전락시킴으로써

김재철 행적,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 확대간부회의 돌연 취소

김재철이 당초 어제(29일) 오전 9시 여의도 방송센터에서 주재하려던 확대간부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사측은 확대간부회의 소집 전날이자 석가탄신일로 휴일이었던 28일 오후 늦게 참석대상 간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회의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문자메시지에는 회의 취소사실과 함께 추후 소집 여부를 통보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를 갑작스레 취소한 배경과 이유는 김재철 외엔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다.

초점 없는 갈팡질팡 행보

김재철의 확대간부회의 전격 취소는 매우 이례적이다. 회사 출근을 재개한 뒤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징계 등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며 으름장을 놔던 지난 2월 말과는 180도 다른 분위기이다. 특히 회사 출근을 재개한 지난 25일 이후 김재철의 행적에서 무엇인가 심하게 쫓기는 것처럼 허둥대는 흔적을 여과 없이 노출시켜 버리는 심상치 않은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무덤에 갈 때까지 땅 속에 묻어둘 줄 여겼던 파렴치한 비리들이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수면위로 속속 고개를 내민 5월 내내 김재철은 평일 근무시간에도 시내 공원과 대중목욕탕을 전전하며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25일 돌연 여의도 본사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재철은 곧바로 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6월 1자로 업무 복귀명령을 내렸고 오후 들어 확대간부회의의 소집을 알렸다. 처음엔 29일 오후 4시 백범 기념관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지만 조금 뒤 회의장소를 방송센터로 바꾸었고 시간도 아침 9시로 당겼다. 퇴근 무렵엔 박성호 기자회견 등 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지난 2월 출근 재개 직후의 도발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인상이 지배적이었다.

연휴 3일간 무슨 일 있었나?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김재철은 회의 하루 전에 돌연 확대간부회의를 취소했다. 중대한 배임죄 피의자인 자신의 처지에 어울리지 않게 독립운동의 성지인 백범 기념관까지 찾아가 확대간부회의를 갖겠다며 비장한 어조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힐 듯 바람을 잡던 지난 금요일의 기세와 비교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란 고사성어가 지나치지 않을 만큼 꼬리를 내린 것이다. 물론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비리에 대해 근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아 회의를 취소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김재철을 둘러싼 환경과 정세가 갈수록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란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을 얻는다. 확대간부회의를 취소한 어제 정오 직전 회사를 나섰던 김재철은 3시경에야 회사로 돌아온 김재철의 표정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납덩이처럼 굳어있었고 시선 역시 초점을 잡지 못하는 등 불안감이 역력해 보였다. 게 공통된 목격담이다. 월요일이 석가탄신일이어서 토, 일, 월요일 연휴가 이어진 3일 동안 김재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대법원 판례로 입증된 김재철의 배임죄

조합이 추가로 고발한 김재철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은 이미 유사한 여러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김재철의 범죄 입증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판례들을 축적해왔다.

“특정가수 노래 자주 틀어도 배임”

대법원은 지난 1991년 방송프로듀서에게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해달라는 청탁도 '배임수재 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991.1.15 선고 90도2257 판결). “방송

은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그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방송법 제4조, 제5조)...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제한된 방송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배임수재 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옳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김재철 역시 출연 기회가 제한된, MBC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에 인기도와 호응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용가 J씨

를 편파적으로 계속 출연시키도록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에서 김재철의 배임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판례라 할 수 있다. 김재철이 지역사와 본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MBC는 확인된 것만 7년간 27차례 20억 원 이상을 J씨에게 출연료 등으로 지급했다.

“부적격업체 자금 지출도 배임”

대법원은 부적격 업체에게 자금을 지출하는 것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997.10.24 선고 97도 2042 판결). 대법원은 “자금을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

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뮤지컬 제작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J씨의 회사에 총 제작비만 10억 원이 넘는 공연을 턴키방식으로 맡기는 등 각종 공연을 몰아준 사례, 사기 전과 전력 등 문제가 있는 J씨의 오빠 J모씨를 MBC 등록 3성 대표로 정실 특채해 고정 급여를 지급한 사례 등 중대한 배임죄의 범죄구성요건을 김재철이 알뜰하게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유의미한 판례인 것이다.

아파트 투기자금 출처 밝혀야



아파트 투기/ 공연 몰아주기 일지

김재철-J씨의아파트 투기		김재철의J씨 공연몰아주기	
2009년5월	H아파트 601동 계약(J씨 명의)		
2009년6월	M아파트 계약(J씨 명의)		
2009년7월	H아파트 602동 계약(타인 명의)		
		2009년9월 <중평인심 일본 페스티벌>	3천만원
		2010년6월 <한국전쟁60주년 '어머니' 오마니>	9천만원
		2010년7월 <국악한마당 '월하청풍'>	5천5백만원
2010년9월	H아파트 602동 명의이전(김재철명)		
		2010년10월 <G20성공기원 국공페스티벌>	1억3천만원
		2010년12월 <여수빅람회 성공기원 가무악극공>	6천3백만원
2011년1월	H아파트 601동 잔금납부 (대출 없음)	확장공사	
2011년2월	H아파트 602동 잔금납부	추가부담	
2011년5월	M아파트 잔금납부	+ 취등록세 납부	
		2011년3월 <J씨의 춤길-최승희에서 J까지>	7천만원
		2011년5월 <일본 대지진자선공연>	8천만원
		2011년6월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4천3백만원
		2011년7월 <세계대 자연경관 선정 D-100일MBC 특별방송>	4천3백만원

김재철의 범죄에 대한 추가 고발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새로 추가됐다. 2009년 충북 오송 지역에 아파트 3채를 함께 구입하고 전세 관리도 같이 해온 사실이 관련 서류와 부동산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만일 아파트 3채를 모두 J씨가 실제 소유했다면, 명의를 넘겨준 김재철은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달리 김재철과 J씨가 아파트를 함께 소유했다면, 김재철은 MBC의 재산을 빼돌려 부정 축재한 것이 된다. 어찌 됐건 형사 처벌은 피할수 없다. 이제 남은 진실의 퍼즐은 ' 과연 김재철과 J씨가 무슨 돈으로

아파트 투자를 했는가' 이다.

'아파트 쇼핑' 이후 공연료 '깡충'

김재철이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MBC 관련 공연은 모두 27건, 액수가 확인된 16건만 따져도 20억 원이 넘는다. 김재철과 J씨가 '오누이' 행세를 하며 오송 아파트를 사들이면서부터 J씨가 공연을 대가로 받아가는 금액은 수천만 원대로 깡충 뛰어들었다. (표 참조-아파트 투기/공연 몰아주기 일지). J씨는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단체 무

용 팀을 꾸려 본격적인 김재철의 공연 특혜를 받아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지난 2010년 9월 아파트 한 채의 명의를 김재철에게 이전한 바로 직후에는 제작비 1억 3천만 원의 대형 공연을 따내기도 했다. 또 2011년 초 아파트 3채의 잔금을 치를 무렵, J씨는 수천만 원대 공연을 집중적으로 성사시켰다. 이 시기엔 아파트 확장 공사 대금과 취·등록세, 등기 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한 시기였다. 이때 김재철은 J씨의 개인 공연(J씨의 춤길-최승희에서 J까지)에까지 MBC의 협찬금 7천만 원을 털어넣었다.

'경제적 한 몸' 한 목소리 증언

김재철과 J씨가 함께 구입하고 관리한 아파트 매입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할 장본인은 바로 김재철 자신이다. "J씨의 아파트를 사준 것 뿐"이라는 김재철의 해명을 끝이곧대로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김재철과 J씨가 '경제적 한 몸'이었다는 사실을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다. 거래 내역을 차마 밝힐 자신이 없다면, 결국 수사 당국의 계좌 추적으로 추악한 진상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김재철은 직시해야 한다.

“김재철, J씨와 식사 162회 법인카드 결제” 대법원 판례, “명백한 배임”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은 유난히 무용가 J씨와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김재철은 무용가 J씨의 집 주변 식당과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집중 사용했다. 김재철은 2010년 3월 MBC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올해 2월초까지 서울 흥은동 소재 특급호텔 중식당에서 48차례에 걸쳐 1천6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4건은 주말과 공휴일이었다. 호텔 중식당 관계자는 김재철이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 과 단 둘이 식사를 하러왔다고 말하고 있다. 김재철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여러 식당과 주점에서 J씨는 김재철의 '사모님'으로 인식되고 있다.

“2년간 J씨와 2천5백만 원 사용”

뿐만 아니라 김재철은 J씨가 지방으로 가면 지방으로, 일본으로 가면 일본까지 쫓아가 법인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J씨의 거주지 또는 동선과 일치하는 지역에서 김재철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대금을 모두 더해봤더니,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62회, 2천 5백여 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측은 이 같은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회사 특보를 통해 “김재철 사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거의 매주 북

한산에 등산을 다니고 있으며 등산을 마친 뒤 지인들을 만나곤 했다고 밝혔다. ...김사장이 만난 지인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이들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만난 지인들도 많았다며...”라며 지인들과 밥 먹고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문제될 건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다. (MBC특보5월 17일자)

“지인과 식사 법인카드 결제는 배임”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지인들과 식사대금으로 법인카드를 사

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도8095 판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판공비 지출용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등의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김재철은 평일 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 그것도 집중적으로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 과 단 둘이 특급호텔 식당에서 무려 48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그 대상이 누구든 딱 떨어지는 업무상 배임죄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인 것이다.

앵커 자격 상실한 권재홍의 적반하장



사측이 오늘(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왕종명 기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징계 사유는 지난 3~5월 보

도 부문 조합원들이 벌인 보도국 농성과 지난 16일 권재홍 보도본부장의 퇴근길에 일어난 일이다. 권 본부장을 차량에 '감금' 해 위해를 가했고, 보도국 농성으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적반하장이라도 넘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이미 '허리' 우드엑션으로 세간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사실 확인조차 없이 거짓말을 <뉴스데스

크>의 톱뉴스로 내보내 MBC의 명예와 신뢰성을 심각하게 추락시켰고 앵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

대화 요구한 후배 폭도로 매도

먼저 5월 16일 야간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자. 박성호 기자회장은 차량에 탑승한 권 본부장에게 '앉은 채로 창문만 내리고 시용기자 채용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본부장이 끝내 대화를 거부하자 차량을 둘러싼 기자들은 길을 터줬고 그 순간까지 어떤 신체 접촉도 일어나지 않았다. 심지어 박성호 기자회장과 최형문 기자가 조합원들에게 '청경들 뒤로 물러나라'며 충고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상황이었다. 불가피하

게 밖에서 대화를 요구했던 이유 역시 권 본부장이 먼저 MBC 역사상 처음으로 5층 보도국을 폐쇄하며 대화의 창구를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권재홍은 '감금'이라는 억지 표현까지 써가며 후배들을 폭도로 매도했다. 참으로 어스럽지 못한 유치한 행태의 연속이다.

파업 초기 보도국 농성은 또 어떠했는가? 박성호 기자회장에게 하고 결정이 내려졌을 때,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주로 바닥에 앉아 침묵 농성을 벌이다 매 시각마다 구호를 외쳤을 뿐이다. 시용기자 채용 방침이 알려졌을 때는 2분 안팎의 발언과 구호 제창으로 항의를 표시했다. 파업 중에 벌어진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농성을 처벌하겠다는 사측의 시도는 노동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겠다는 도발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마이크를 쥐고 구호를 외치거나 발언한 사람은 징계에 회부된 3명만이 아니었다. '김재철, 권재홍 물러나라'는 구호는 조합원 모두의 외침이었다.

오늘 기자총회 전면대응

보도 부문 조합원들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 3명에 대한 인사위 회부 소식이 전해지자 보도국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의 글을 올리고 있다. "딱장뉴스의 끝은 어디냐", "방승이 흥기냐"는 개탄과 분노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도부문 조합원들은 오늘 인사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기자총회를 열어 전면적인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재철 사장님의 형량은?

조합의 고소장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세 가지다. 먼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배임 혐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중에서도 범죄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따로 특경가법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무려 20억이 넘는 회사 돈을 써가며 사업 타당성 심사도 없이 무용가 J씨의 행사를 지원해준 김재철 사장의 행위는 바로 이 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법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최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조합이 현재까지 확인한 배임 액수는 20억인데, 여기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배임 규모가 50억 원 이상으로 커질 경우, 형량은 다시 최소 5년 이상 최대 무기 징역까지 높아진다.

중대 범죄의 실체적 경합

김 사장은 지난 3년간 사용한 7억 원의 법인카드 내역 가운데 명품 구매, 호텔 숙박과 중식당 이용대금 등 2억 1천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56조 위반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인사규정, 채용규칙 등을 무시하고 위인설관(爲人設官)해, J씨의 친오빠를 정실 채용한 것도 같은 법 위반으로 보인다.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한 범죄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이 J씨와 함께 아파트 3채



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J씨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돌린 것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단지 키다리 아저씨의 국악인 후원이 아니라면, 비록 배임죄보다 중한 범죄로 취급되진 않지만, 죄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국이면 징역 45년 가능

김재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각 배임 범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고 보면, 현재 밝혀진 액수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4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미국 사법부는 분식회계를 했던 엔론사의 전 CEO에 대해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우리 사법부도 김재철과 같은 악인을 징치(懲治)함으로써 나라의 공공영역과 경제 질서를 바로잡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KBS 새 노조 김현석 위원장 무기한 단식 돌입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과 KBS 새 노조 김현석 위원장이 MB정권의 언론장악 실태에 대한 국정 조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김현석 위원장 등은 어제(29일) 여의도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곡기를 끊어 지난 4년간 자행된 언론 장악의 패악(悻惡)을 끊고 언론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특히 언론 장악 국정조사와 청문회뿐만 아니라 언론을 사유화한 낙하산 사장을 퇴출시키고 공영 언론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과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노조가 전국의 성인남녀 1,061명을 상대로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6%가 '언론사 파업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김재철 등 낙하산 사장 퇴진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은 75.8%에 달했다. '19대 국회 국정조사 및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자 역시 75.6%로 높게 나왔다.

